

1	⑤	2	③	3	④	4	①	5	⑤
6	④	7	③	8	⑤	9	④	10	⑤
11	①	12	②	13	②	14	③	15	①
16	④	17	④	18	①	19	②	20	⑤

### 1.

**출제 주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해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호 견제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교사가 말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이다.

답 ⑤ 위헌, 위법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입법부가 아니다.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과 위헌 법률 심판이다.

### 2.

**출제 주제:**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

**해설:** (가)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한다.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오답 풀이:**

㉠의 설명은 (가)가 아니라 (나)의 관점에 가깝다. ㉡ (나) 관점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지 않는다.

답 ③

### 3.

**출제 주제:** 시대별 민주 정치의 특징(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해설:** 대의 민주제(간접 민주주의)가 아닌 직접 민주제가 시행된 A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이다. 보통 선거제도는 근대 이후 성립되었기 때문에 B는 근대이고 C는 현대이다.

**오답 풀이:**

㉠ A(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참정권이 부여된 사람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 남자뿐이다. 성인 남자라도 외국인이거나 노예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 ㉡ 민회는 C(현대)가 아니라 A(고대 아테네)에서 열린 것이다.

답 ④ ㉢㉣ 보통 선거 제도 채택 후 더 많은 사람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B(근대)에 비해 C(현대)에 더 활성화 되었다.

## 4.

출제 주제: 민주 선거 원칙-비례 대표제 위헌 판결

해설: 유권자가 1인 1표일 때는 정당에 투표를 못하고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투표한 후보자의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자동 계산 되었다. 이는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와 정당이 다른 경우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해 (가)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찍을 경우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유권자의 표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나)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답 ①

## 5.

출제 주제: 헌법 조항(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기본권 제한)

해설: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한계에 대하여 말한다. '제한할 수 있으며,'의 앞부분은 실정법적 성격을, 뒷부분에는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 ③ 효과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제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④ 37조 2항에는 기본권이 실정법상 권리와 천부적 권리에 둘 다 해당한다고 말한다.

답 ⑤ 헌법 제 37조 2항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말한다.

## 6.

출제 주제: 통치에 대한 생각

해설: (가)는 공자의 통치에 대한 생각이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자연법사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가 설명에 부합한다.
- ② (나)는 형벌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본다.
- ③ (다)는 저항권을 우선적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중대한 불의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최후 수단적)
- ⑤ (다)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답 ④

## 7.

출제 주제: 참정권-공무 담임권

해설: 이 문제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는 과도한 선거 기탁금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기탁금이 과도해 많은 사람들의 공무 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내용이다. 결정 요지 부분에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라는 말이 있으므로 (가)에 들어갈 말은 참정권(공무담임권)이다

**오답 풀이:**

- ① 참정권(공무담임권)이 아니라 사회권에 관한 내용이다.
- ②는 행복 추구권에 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 ④의 내용은 청구권이다.
- ⑤ 일정 요건을 만족한 외국인은 차별이 있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다.(지방 선거에 한해서)

답 ③

## 8.

**출제 주제:** 전형적인 정부 형태(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해설:** (가)는 국민이 행정부를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한다. 따라서 (가)는 대통령제이다. (나)는 국민이 입법부를 선거를 통해 구성한 뒤 입법부 내에서 행정부를 구성한다.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오답 풀이:** ㉠ (가)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와 따로 구성된 존재로써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나)의원내각제가 아닌 (가)대통령제에서 권력의 분립에 중점을 둔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한다.

답 ⑤ ㉢(나)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인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 (가)대통령제는 양측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한 대립의 가능성이 있다. (나)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임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가 (가)에 비해 용이하다.

## 9.

**출제 주제:** 정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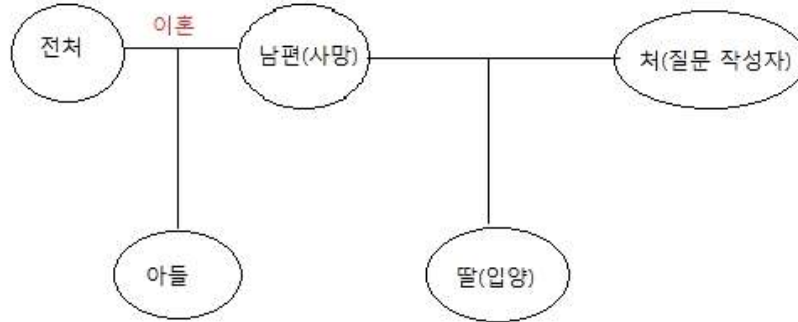
**해설:** 갑국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이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답 ④ 공청회, 시민의 발언 기회 등은 정책 결정을 느리게 한다.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과정이 없어야한다.

## 10.

출제 주제: 상속

해설:



오답 풀이:

갑-남편이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 바뀌기 위해서는 등기해야한다.  
을-재산만 상속되지는 않는다.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잘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단순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된다.

답 ⑤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처의 법정 상속분은 50% 가산해야된다.

## 11.

출제 주제: 법적 판단-민사

해설: 갑(25세)은 을의 이사 회사에 취업했다. 병은 을의 회사에 이사를 맡겼고 갑과 을은 이삿짐을 옮기게 되었다. 그러다 갑이 도자기를 파손하였다.

오답 풀이:

- ㉠ 갑이 고의로 깨뜨리지 않았더라도 병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민법 제 750조)
- ㉡ 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직원이 업무 중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배상해야한다.

답 ① 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병이 청약했고, 을이 승낙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 12.

출제 주제: '개인 생활과 법' 복합 문제

해설: (가)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나) 갑은 을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법원에서 을이 3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법원에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오답 풀이:

㉠ 갑이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계없이 형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여야 한다.(형사 고소)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항소이다. 상고는 2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답 ② ㉠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는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승소 후 받아들 돈이 상대방에게 없을 가능성도 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가능성) ㉡금전을 빌려 준 사실 및 액수, 돌려받기로 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원고(돈 빌려준 사람: 갑)에게 있다.

## 13.

**출제 주제:** 제한 능력자 제도(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제도)

**해설:** (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지만 법원이 정한 사항이나 일상행위와 대가가 적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나)는 한정후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한정후견제도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고 일상행위와 대가가 적은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 ①성년후견제도에에서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 ③기존의 한정치산제도가 (나)한정후견제도로, 금치산제도가 (가)성년후견제도로 대체되었다.
- ④(가)와 (나)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권리능력은 출생 순간부터 사망한 순간까지 유지된다.(민법 제 3조)
- ⑤(가)와 (나)의 시행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재산법상 법률 행위의 범위가 넓어졌다.

답 ②

## 14.

**출제 주제:** 형사 문제 복합

**해설:** 갑은 아래에 별표 뒤의 내용에 따라 만 18세이다. 혼인을 할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나이는 만 18세 밖에 없다.

회사원 A(40세)는 갑(18세)이 을(15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 하였지만 갑이 을을 계속 폭행해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갑을 밀쳤다. 그러자 갑이 A를 몽둥이로 폭행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A는 타인의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에 들어가 숨었다.

**오답 풀이:**

- ① 정당방위로 갑을 밀쳤다고 A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혼인 여부와 관계없다. 미성년자의 혼인은 민법 상 성년의제일 뿐 형사 사건과 관계없다.
- ④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다. 갑은 만 18세이다.
- ⑤ A가 입은 상해에 대해 갑은 민사상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 갑은 정상적인 사리 분별 능력이 있다.

답 ③ 갑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소년에 해당한다. 만 19세 미만인 자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다.

## 15.

출제 주제: 위법성 조각 사유

해설: 회사원 A(40세)는 갑(18세)이 을(15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 하였지만 갑이 을을 계속 폭행해 ㉠갑의 폭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갑을 밀쳤다. 그러자 갑이 A를 몽둥이로 폭행하여 ㉡생명에 위협을 느낀 A는 타인의 가게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가게에 들어가 숨었다.

㉠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이다. ㉡은 자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이다.

답 ①

## 16.

출제 주제: 형사 절차

오답 풀이:

- ① 고소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는 고발을 할 수 있다.
- ② 구속 적부 심사를 검사가 청구할 이유가 없다. 피의자가 할 수 있다.
- ③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국민 참여 재판이 있으면 안된다.
- ⑤ 무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형사보상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답 ④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의 평결은 강제성이 없다.

## 17.

출제 주제: 행정 심판

해설: 행정상 분쟁 중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행정 쟁송 절차는 행정 심판이다.

오답 풀이:

- ① 국민 신문고 제도는 행정민원의 종류이다.
-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청문 절차는 필요 없다. 행정심판은 사후적 구제 수단이고 청문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다.
- ③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하는 기관은 행정 심판 위원회이다.
- ⑤의 설명은 행정 상 손실 보상제도이다.

답 ④

## 18.

출제 주제: 국제 정치와 법 복합

해설: (가)는 교토 의정서를 체결한 내용이다(1997) (나)는 제3세계 등장에 관한 내용이다. 이 이후에 냉전이 완화됐다. (다)는 6.23 선언에 관한 내용이다. 6.23 선언에는 남북한의 상호간 내정 불간섭, UN 동시가입 추진, 비적대적 공산국가에 대한 문호 개방의 내용이 있다.

오답 풀이: ㉠(나)를 계기로 국제 연합이 창설된 것이 아니다. 국제 연합은 2차 대전 이후 창

설되었다. ㉞ 냉전체제 종식은 1989년 몰타 선언 이후이다. (나)는 1970년대 이후의 내용이고 (다)는 1973년 6.23 선언의 내용이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다.

답 ①

## 19.

출제 주제: 위헌 법률 심판

오답 풀이: ㉞의 설명에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부분은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의 설명이다. ㉞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할 수 있다. 개인은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답 ② ㉞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 되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㉞ 관계없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 20.

출제 주제: 근로자의 권리와 법

해설: 갑은 출산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답 ⑤ 구제 절차와 관계없이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